

스페인 경제위기에 대한 보수적, 신자유주의적 대응

Miguel Martinez Lucio (영국 맨체스터경영대학원 교수)

스페인에서 새로운 우익 정부가 선출되고 우익 인사들이 스페인 의회에서 다수를 점하게 되면서 스페인은 현재 직면한 경제위기에 비교적 일관되면서 단호한 대응책을 내놓고 있다. 스페인은 노동인구의 약 1/4이 실업상태이며, 공공부채와 공공부문 적자가 많이 늘어난 상태이다. 금융권의 위기와 건설업을 포함한 주요 부문의 고용 및 실적 하락은 국가 지출 측면에서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다. 유럽연합(EU)의 지속적인 유로화 안정을 위한 경제적 기준에 부합하며 상당히 잘 관리되어 온 스페인 경제가 갑자기 심각한 하향 경제로 돌아서 외부 자급에 의존하게 되면서 유럽 경제계에 큰 우려를 낳고 있다. 스페인의 성장 모형에 대해서는 상충되는 해석들이 존재한다. 우파 정치권에서는 실업이 해고 비용과 같은 노동시장 경직성에 기인하며 현 경제상황은 국가의 지나친 역할에 의하는데, 이러한 현상이 최근의 경제위기로 더욱 심화되었다고 주장한다. 한편, 좌파에서는 1970년대 및 1980년대에 스페인의 경제발전이 추진되어 온 방식이나 특정 주요 산업분야에 투자가 부족했던 점을 감안해 볼 때, 금융제도가 정치적·경제적 측면에서 너무나 지배적인 역할을 하며 공업이나 제조업 자본이 아닌 유흥업, 관광업, 건설업을 기반으로 하는 개발 관점이 만들어지면서 그 결과로 스페인의 경제성장이 중도에 꺾였다고 주장한다.

직전의 사회주의 정부(2004~2011년)는 경제위기 대응책으로 초반에 지출을 늘리고 건설업과 같은 분야에서 국가 기간사업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전략이 실패하자 - 또는 실패라는 평가를 받자 - 정부는 스페인 금융제도 내 불안정이 심화되면서 공공부문에 제약

을 가하게 되었다. 이는 공공부문 근로자들의 임금 삭감으로 이어졌다(The Guardian 2010년 5월 12일자). 다른 대응책으로, 정부는 공공지출 사업을 축소하고, 이 분야의 투자를 제한하며, 정년을 67세로 늘리고, 고용계약과 관련하여 스페인의 해고 비용을 절감하기 시작했다. 사회주의 정부는 금융부문의 취약점이 드러나면서 점차 악화되어만 가는 상황에 빠르게 대처해야 하는 입장이었다. 2011년 가을 총선에서는 경제난이 국제적 경제상황이나 스페인의 개발 및 탈산업화 정책의 성격이 아니라 사회주의 정부의 대응과 결부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우익 정당인 민중당(Popular Party)은 점차 부상하고 있는 신자유주의적 의제를 기반으로, 공공부문과 노동시장 개혁에 대해 더 단호한 입장을 개진하기 시작했다. 과거 민중당 정부(1996~2004년)는 신자유주의 정책을 그다지 강경하게 추진하지 않아서, 노동조합과 뜻밖이지만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했었다. 스페인은 유럽의 다른 북부 국가들과 비교해 볼 때, 단체 교섭이나 규제제도에 있어 그만큼 제도화되거나 집중화되어 있지 않지만, 당시 민중당 정부는 사회적 대화의 역할을 근거로 하여 정치적 합의를 공고히 하였다. 그 기간 중에는 정부와 연관된 다양한 노사정 단체와 이를 통해 관리되는 기금을 통해 근로자훈련 및 학습개발 프로그램이 마련되고, 이러한 구조를 기반으로 사용자와 노조에게 제도화된 역할이 존재했었다. 이러한 노사정 3자 구조를 통해 근로자 훈련을 목적으로 하는 대규모 자금이 조직되었으며, 이 구조 속에서 노동조합은 재직근로자 및 해고근로자의 훈련을 제공·지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는 노동조합의 국내 정치 영향력이 유럽 북부 국가들의 경우에서만만큼 강력하지는 않지만, 근로자 훈련 및 기타 관련 분야에서 제도화된 역할을 지니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러한 합의 모형은 민중당의 당권과 내에서 위협을 받게 되었다. 지난 5~10년간, 스페인의 우파에서는 미국의 '티파티(American Tea Party)'와 같은 미국 근본주의적 우파의 일부와 새로운 교류가 생겨났으며, 이와 함께 외국인 혐오 및 반국가/공공부문 담론을 추구하는 특정 TV 채널과 신문을 둘러싼 새로운 언론 관심이 등장하고, 노조운동을 병행하면서 상용직으로 고용되어 있는 공공부문 근로자들의 권리와 활동을 신랄하게 비난하는 경향이 커져갔다. 스페인 우파는 항상 양면적인 배경을 지니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현재 구성원의 상당수가 과거 프랑코(General Franco) 독재정권(1939~1975)의 수뇌부에 있었거나 그들과 관련이 있다

는 점에서 독재정권과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민중당이 민주적 체제였던 제2공화국을 무너뜨린 1936년의 군사 쿠데타를 비난한 적이 없다는 점이다. 우파는 선거에서 극우 극단주의자들의 표를 확보하는 데 성공하였으며, 이에 대해서는 그러한 잠재적 파시스트 유권자들을 1970년대 이후의 새로운 민주주의로 끌어들이 신생 민주주의를 안정화한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 볼 때, 극단적인 우파적 요소들이 점차 국가의 새로운 신자유주의적 비전과 연결되고 있다. 우파적 이미지는 약화시키면서 1996년 선거에서 주효하였던 진보-중도적 요소들을 강화시키기 위해, 민중당은 경제성장과 호황을 배경으로, 기존에 마련되어 있는 노사관계 및 규제체제 내에서 무난히 꾸려나가면서 노조의 반발 가능성도 줄일 수 있었다. 그러나 부분적으로는 스페인이 미국의 부시 정부와 영국의 블레어 내각과 연합한 것에 원인이 있는 2004년 선거 패배 이후(이러한 연합으로 선거기간 중인 2004년 3월 11일에 테러 공격이 발생하였음), 이러한 앵글로-색슨 연합관계는 노동조합, 노동법 및 복지국가에 대한 강한 적대감을 바탕으로 하는 더 노골적인 신자유주의적, 시장지향적 정치관으로 이어졌다.

민중당의 우파 성향 강화 움직임이나, 이 당이 1980년대 로널드 레이건과 마가렛 대처와 유사한 담론을 펼치는 방식을 쉽게 간과해서는 안 된다(영국의 'New Right'에 대한 논의는 Hall, 1988 참조). 이러한 현상은 경제위기의 조짐이 보이기 훨씬 전에 나타났다. 지난 10년간 마드리드 지역 내에서, 민중당이 이끄는 지방정부는 노조의 제도적 역할을 약화시키고, 공공부문 전문가에 대해 적대적 태도를 취하며, 민영화에 더 큰 관심을 표명하기 시작하였다. 스페인의 보건서비스는 대부분이 지방정부를 통해 지역 차원에서 제공되고 있는데, 마드리드 지역에서는 민간부문 기업들이 활용되고 시장지향적, 탈중심적 접근법이 채택되면서 독특한 민간-공공 믹스 구도가 나타났다. 실제로 2000년대 말 경제위기 전, 그리고 2011년 우익정부 선출 전에 스페인 우파 측에서 더욱 공격적인 신자유주의 의제의 조짐이 분명했으며, 일단 경제위기와 결합되자 변화의 가능성은 더욱 분명해졌다. 새로이 부상하고 있는 우파는 공공부문에 오명을 씌워 약화시키려 하였으며, 따라서 국가의 역할은 민중당이 국가 권력을 잡았을 때 경제 위기에 대한 대응책을 통해 신자유주의의 정치적 정당성을 알리는 중요한 수단이 되는 데에 있었다.

2011년 11월 총선에서 승리하면서 집권한 마리아노 라호이 총리의 민중당 정부는 바로 집

권 초기부터 공공부문 삭감을 정부의 과제로 삼았던 영국의 2010년 보수-진보 연합정부를 따라하기 시작했다. 공공적자가 예상보다 훨씬 크다는 사실에 직면하고, 스페인 공공부채 총당을 위해 발행한 공채를 통해 국제 자금 확보가 상당히 불투명한 시기에 집권하면서, 민중당 정부는 현대 스페인 국가 역사상 가장 대폭적인 삭감을 단행하였다. 이 구상안은 다음의 내용을 담고 있다.

첫째, 근로자 해고 비용이 더욱 삭감되었다. 근로자 50인 미만 기업(스페인 전체 기업의 99%가 이에 해당함)의 경우, 신규 무기계약은 1년의 수습기간을 두고 체결할 수 있으며 사회보장 기여금 요건도 완화되었다. 특정 근로자들은 이러한 유형의 계약을 체결할 경우 자신의 실업급여 중 일부를 청구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임금수준은 더 낮아지게 되었으며, 무엇보다도 정리해고 비용 지급에 있어 유연성이 더욱 커졌다. 즉, 기업과 근로자 대표는 예상보다 낮은 금액의 퇴직금 지급에 합의할 수 있게 되었다(Sanz de Miguel, 2012). 기업이 일정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재정난을 겪는 경우, 근로자를 해고하고 근무기간에 비해 더 낮은 일수로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여러 지자체의 시의회에서 이 법을 활용함으로써 자동적으로 기존 근로자를 해고하고 근무기간 1년당 20일의 보수를 지급하고 있다. 또한 일련의 신설법에 의해, 일부 경우에는 산별협약에서 정한 조건보다 낮은 조건으로 재합의하거나 심지어 특정한 경제적 상황하에서는 일부 조건을 적용 제외하는 기업별 단체협약 체결이 가능해졌다(ibid). 이러한 동향에 따라, 한때 스페인 경제에서 합의에 의한 정책입안 및 결정의 초석이었던 단체교섭제도의 구조와 내용이 약화되었다. 스페인 노사관계제도의 여러 특징 중 하나이면서, 동시에 스페인의 노조조직률이 15~20%에 불과함에도 광범위한 근로자와 근로조건을 규제할 수 있었던 이유는, 지역별 협약의 기초를 제공하면서 전체 근로자의 4/5 이상에게 효력을 지녔던 산별협약의 역할에 있다. 새로운 임금협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인플레이율에 따라 임금을 인상하는 조항을 통해, 임금인상을 인플레이율에 연동시키는 방식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임금수준이 유지되도록 하였다.

단체협약의 이러한 자동조정 기능에 대해, 실제로 다수의 협약이 교섭에 의해 체결되지 않고 노사간 논의나 적극적인 노사관계 절차 없이 연장되고 있다는 사실을 은폐한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사용자와 스페인 우파가 단체교섭의 이러한 취약성을 알고 있으며 이러한 '조정절차'에 맞서게 되면 노동규제 제도가 약화되고 추가적인 규제완화 기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도 가능하다. 따라서 민중당 정부의 개혁과 노동규제에 대해 드러나는 적대감을 논하는 데 있어 한동안 이 제도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었으며, 더 강력한 대응책과 사회 및 노조의 관점에서 조정시스템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면서 의도치 않게 스페인 우파와 사용자들에게 이 제도를 약화시키려는 책략을 모의할 여지를 제공했을 가능성도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Martinez Lucio, 1998). 정부는 외형적으로 보이는 것보다 취약한 단체교섭 관련 고용규제체제라는 문제에 직면해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변화에 따른 결과는 고용의 성격을 더욱 불안하고 불안정한 상태로 몰아갈 것이다. 민중당 정부는 현재 실업률이 50%에 육박하는 청년층을 포함하여 더 많은 사람들을 노동시장으로 편입시킬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현재 스페인 노동시장이 경직되어 있고 비교적 근로자 해고가 어려워 비용이 많이 드는 상황이지만 일자리 파괴로 인해 실업률이 무려 25%에 이른다. 따라서 규제완화는 민중당 정부가 주장하는 것처럼 고용증가로 이어진다는 보장이 없다(Fernandez Rodriguez and Martinez Lucio, 2012(근간)). 따라서 공공정책의 이러한 특징은 사회적 합의와 노사관계 및 고용규제에 관한 사회지향적 관점과는 분명히 거리가 멀다.

신정부 대응책의 두 번째 측면은, 대중교통과 같은 상업적 공공서비스의 비용을 증가시키려고 한다는 것이다. 철도, 지하철, 버스 등의 대중교통 비용은 대폭 인상 및 가격재조정 전략의 주요 대상이었다. 비용을 북부유럽 수준(또는 그 이상으로)으로 조정하려는 움직임은, 국제금융시장이 불러온 공포와 스페인 국채의 불확실성에 기인한 대응책이다. 이것이 신자유주의 의제의 반영인지 아니면 국가가 직면한 압력에 대한 반응인지는 아직 분명하지 않지만, 이로 인해 경제위기의 비용을 근로자 계층과 공공서비스 사용자들이 부담하고 있다는 인식은 더욱 강화되고 있다. 그러나 다양한 공공서비스와 자산을 민영화하려는 움직임은, 정부 내에서 거의 반대가 없는 더 확고한 시장화전략(strategy of marketisation)이 되살아났음을 의미한다(이와는 달리, 영국은 현재 연합정부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미약하기는 하지만 정부 내 찬반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반국가주의적 담론(anti-statist discourse)은 이러한 특정 분야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실제로 의약품 구입 비용과 병원 입원 비용이 중요한 정책 옵션으로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대학등록금은 인상되고 있으며, 노사관계 및 대화에 있어 합의적이며 매우 혁신적인 기반이었던 훈련체제는 점차 와해되고 있다.

전체적으로 세금이 인상되었지만, 주목할 만한 사실은 스페인의 상류층과 중산층의 고소득 집단의 경우에는 소득에 비례하여 세금인상이 이루어진 반면, 나머지 중산층과 근로자 계층의 세금부담은 지나치게 커졌다는 점이다. 이와 같이 정부 대책에 재정적 측면이 커지고 있다는 사실은 전적으로 민영화와 특정 상업서비스 비용 인상에만 중점을 두고 있는 점과 일맥상통하지만, 상류층의 세금이 크게 인상되지 않았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며, 이는 사용자 계층의 혁신적인 고용창출 역할에 관한 우파의 시장중심적 견해와 맥을 같이한다. 비례세인 간접세도 인상되었다. 민중당이 세금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공약했던 점을 감안하면, 현 경제위기의 심각성을 가히 짐작할 수 있으나, 이러한 세금인상은 임금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야 한다.

그러나 많은 이들은 이러한 정부 방안이 근검절약 문화를 조성하여 결국 실업이 증가하고 정부 수입은 줄어드는 악순환으로 이어져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한다(Kadlec, 2012). Kadlec(2012)에 의하면, “스페인의 보수당은 실업률을 21.5%로 높인 사회주의 정부의 긴축정책에 반대하며 지난 11월 선거에서 압승을 거두었다. 그러나 예상보다 심각한 재정적자에 직면하여, 신정부는 세금인상은 없을 것이라는 공약을 깨고 적자를 메우기 위해 소득세 및 재산세 세율 인상을 단행한 바 있다. 그러나 현재 스페인의 실업률은 대공황 수준인 24.4%로 증가하였다. 결과적으로, 스페인 정부는 적자 감소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 이러한 설명은, 유사한 효과를 가져올 뿐 아니라 이미 취약한 사회구조를 더 악화시킬 수 있는 사회적 지출 감소에 따른 비용을 다루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모호한 점이 없지 않다. 그러나 긴축정책이 효과가 없을 수 있다는 점은 분명히 하고 있다.

셋째, 이전 정부에서 이미 대폭 삭감한 바 있는 공공부문 임금이 계속 인하되고 있으며, 따라서 스페인 현 정부가 여전히 공공부문을 정치적 타깃으로 삼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실제로 이러한 조치들이 동기부여 및 노사갈등의 측면에서 어떠한 내적·외적 결과를 가져올지는 아직까지 드러나지 않고 있다. 이에 뒤이어, 공공부문에서 해고 발생률이 높아지고 있다. 지방 정부의 공무원 감원도 한뼘하고 있다. 스페인에는 17개의 주가 있으며, 공공부채 및 적자의 상당부분이 1980년대에 등장한 이러한 정치적 구조에 기인한다. 각 주의 관리 및 행정은 질적 또는 실효성 측면에서 차이가 있지만, 스페인 동부의 발렌시아 지방(Comunidad Valenciana)과 같은 일련의 지역에서 공무원 인력 감축을 결정하였듯이 감원이 전반적인 현상이 되어 가고 있

다. 이러한 지역적 측면에 의해, 스페인 우파는 정치적 담론에서 국가의 연방구조에 문제를 제기하고 공공지출의 관리를 위해 국가의 중앙집권화를 요구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알고 있듯이, 이 또한 스페인 우파의 의제에 숨어 있는 일면인 지역적 정체성에 대한 경멸을 반영하는 것으로, 스페인 국가의 민주적 특징이 가장 취약한 상황에 있을 때 모습을 드러내는 우파의 정치적 담론이다.

넷째는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의료 및 교육 부문과 관련된 것이다. 정부는 이 부문들을 최대한 보호할 것이며 자원공급에 있어 심각한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공언하였다. 유럽의 공통적 특징은, 비용 및 서비스 절감 방안이 있어 체계적이고 적극적이면서 복지국가의 동맥이라 할 수 있는 공교육, 국민의료, 국민연금을 보호할 수 있는 새로운 위기관리 전략을 개발하였다는 데 있다. 그러나 이 부문에서 점진적인 자원 감소가 목격되기 시작하였으며, 게다가 이 부문들을 - 특히, 공교육과 국민의료 분야 - 개방하여 민간에 의한 서비스 제공과 심지어 민영화 가능케 하려는 움직임이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이에 대한 논의는 현재 국가가 탈집중화를 추진하고 '자율' 학교, 병원 및 종합의료체계를 중심으로 시장 매커니즘을 도입하고 있는 영국에서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스페인에서 의료와 교육은 지방정부가 관할하는데, 현재 지방정부들은 예산 삭감 압박을 받고 있고 각 지방마다 비용 절감을 위한 비교적 자율적이면서 다양한 접근법을 도입하고 있다. 게다가, 스페인 국민연금수급자 중 4백만 명이 최저 임금 수준 미만의 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스페인은 최소한 또는 낮은 수준의 복지국가이기 때문에, 복지를 더 줄이게 되면 스페인은 사회적 배제에 있어 미국과 같은 처지에 이르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전개되는 논의에는 공공부문 근로자들과 전문직 종사자들은 좌향 또는 사회주의적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스페인 우파의 반전문직 담론(anti-professional discourse)이 숨어 있다. 복지국가에서는 (이전에는 부재하거나 존재가 미약했던) 새로운 전문적인 진보계층이 확고한 입지를 갖게 되었고, 최근에는 이 계층이 이전의 공무원과 중산층의 우파적, 구교적 논리에 맞서는 새로운 진보적 의제와 정치의 기반이 되고 있다. 따라서 다시 한번 밝히지만, 정치적 방편은 기저에 깔려 있는 조류 및 동향과 연결되어 있다. 즉, 현 민중당 정부는 집권 중에 이 두 가지의 조화를 꾀하면서 새로운 우파적 의제를 구상하고 있다.

우려할 만한 상황은, 이민자들도 경제위기의 부정적 영향을 크게 받고 있다는 점이다. 스페

인은 과거에 이민자의 유입률이 상당히 낮았지만 최근 20년 동안 EU에서 이민자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에 속하게 되었다. 이민자들의 직업은 대부분 서비스부문의 최하위 부문과, 건설업, 유흥업과 같이 경제위기에 매우 취약한 부문에 위치하고 있다. 경제위기가 이들에게 미치는 파급효과는 너무나 커서 실업률은 35%를 넘어섰다. 실제로 이민은 스페인의 정치적 논의에 있어 중심 주제는 아니지만, EU 출신이 아닌 이주민에게 의료서비스 접근권을 제한하는 문제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면서 우파 정치인들에 의한 이민에 반대하는 내용의 여러 성명이 최근에 발표되고 있다. 이로써 1990년대에서 2000년대 초중반까지의 경제성장기에 도출되었던 사회적 합의가 무너지고 있다(The Economist, 2010).

이러한 정책과 변화의 파급효과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분명해질 것이다. 경제와 사회 전반에 미치는 효과를 이해하기에는 시기상조이지만 처음에 나타나는 징후는 결코 경기 호전에 기여하는 요소들은 아닐 것이며 오히려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노사관계 지형은 점차 강성화되고 있으며, 일련의 대응방안을 통해 노조 조합원, 청년층, 그리고 가장 두드러지면서도 예기치 못했던, 이주근로자와 같이 다양한 집단들이 결속하고 있다. 이 집단들은 (특히 청년층과 노조는) 지난 사회주의 정권 아래에서는 서로 긴장관계에 있거나 부정기적인 방식으로 관련을 맺고 있었는데, 부분적인 이유는 노조가 다양한 이슈와 관련하여 당시 정부와 긴밀한 유사조합주의적(quasi-corporatist) 관계를 유지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새로운 정치적 상황을 맞이하면서, 여러 조직들과 사회운동으로 새로운 대화가 생겨나고 정부의 지출 삭감에 맞서 일련의 대응책이 마련되었다. 이러한 대안적 사회적 대화와 정부에 대한 대응은, 우파 정부가 우파의 전통인 전제주의적 특징, 민족주의적 기질, 금융자본과의 관계 등을 전면에 드러내는 가운데 더욱 공고해질 것이다.

스페인의 동향과 정부의 대책을 가장 잘 기술하는 방법은 이를 ‘공포 정치(politics of panic)’의 현상으로 보는 것이다. 그러나 부채와 적자에 조급하게 반응한 정치적 움직임 속에서, 우리는 국가의 상황을 그 원인과는 무관하게 문제로만 치부하려는 신자유주의적이며 외국인 혐오적인 담론을 발견할 수 있다. 문제는, 영국과 미국에서 이와 유사한 일이 발생하였던 1980년대와 달리, 이번에는 개혁 시한이 훨씬 짧아서 그로 인한 파급효과가 더 크고 정치적 후폭풍이 발생할 가능성도 더 크다는 데에 있다. 이럴 경우 노조가 동원되는 새로운 정치적 국면과 함께 자율적, 반자본주의적 성향을 바탕으로 하는 새로운 사회운동이 등장하면서, 스페인의 정치계는

더 심각한 불안정의 핵심에 놓이게 될 것이다.

실제로, '투기적' 성장모형, 사회의 금융화, 은행에 의한 민영주택공급 및 허술한 대출, 1980년대 이후의 산업 균형 경제구축 실패는 충분한 정치적 성찰의 바탕으로 삼을 수 있다. 그러나 이전 접근방식의 실패에 대한 합리적 성찰과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이유는, 현 정부가 스페인 국민들과 그들의 '진보'를 방해하는 새로운 '적'을 만들어냄으로써 정부정책에 대한 지지를 구하는 데에 있다. 즉, 정부는 국가 자체로 인한 '비용', 국가 인력의 '특혜적' 지위, 핵심 근로층의 '경직성', 이민자를 비롯한 새로운 '가시적 외부자(visible outsider)' 등을 '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것이다. 반민주적이고 외국인 혐오적인 국가에서 정치적 문제가 등장할 가능성은 매우 높다. 따라서 문제는 유럽 및 세계적인 차원에서 해결되거나 아니면 지역 차원에서 해결되겠지만, 지역 차원에서는 예상보다 더 심한 정치적 폭력을 겪게 될 것이다. **KLI**

참고문헌

- The Economist(2010), “Spain and Immigration”, February 4th, <http://www.economist.com/node/15464909>
- Hall, S.(1988), *The Hard Road to Renewal*, London: Verso
- Kadlec, C.(2012), “Austerity, and the Failure of the Governing Elite”, *Forbes* March 30th <http://www.forbes.com/sites/charleskadlec/2012/04/30/austerity-and-the-failure-of-the-governing-elite/>
- Martinez Lucio, M.(1998), “Spain: Regulating Employment and Social Fragmentation”, In *Changing Industrial Relations in Europe(2nd Ed.)*, ed. Anthony Femer and Richard Hyman, Basil Blackwell.
- Fernández Rodríguez, C. J. and Martínez Lucio, M.(forthcoming), “Narratives, Myths and Prejudice in Understanding Employment Systems: The Case of Rigidities, Dismissals and the Question of Flexibility in Spain”, *Economic and Industrial Democracy*.
- Sanz de Miguel, P.(2012), ‘Unions oppose new laws sanctioning greater flexibility’, EIRO, <http://www.eurofound.europa.eu/eiro/2012/02/articles/es1202021i.htm>